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 서민금융 공약 비교 · 평가

03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06	쟁점1.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
11	쟁점2.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15	쟁점3. 서민금융
18	총평

차례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3
쟁점1.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	6
쟁점2.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11
쟁점3. 서민금융	15
총평	18

보고서의 목적과 평가 방법

보고서 목적

본 보고서는 20대 총선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공약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평가 대상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하고, 정책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각 정당이 발표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과 이외는 별도로 발표한 공약 관련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함.

2015년 말 기준 자금순환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1,422조 7천억 원(잠정)이며 가계신용 기준으로 1,200조 원(잠정)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그 총량과 함께, 소득의 증가보다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와 질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고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및 면책제도 저소득·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등과 같은 조치들이 요구됨.

본 보고서는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종합하고 3가지 쟁점 - 1.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2.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3. 서민금융 - 을 중심으로 제시된 공약을 비교·평가함.

쟁점1.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시행한 LTV·DTI 완화를 통한 소위,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과 대출가능금액의 최대치를 대출받는 비중이 증가함. LTV·DTI 등 규제완화에 기인한 가계부채는 그 규모와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으로 인해 향후 연체율 급증과 가계부실, 금융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 있음.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 구조개선 효과의 한계를 보임.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집단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한편 대부업을 합법화하면서 대부업체, 나아가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체까지 허용한 특혜 고금리는 지속적인 신용공급의 과잉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4개 정당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 있음.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을 ▶고금리 대책 ▶가계부채 구조개

선 방안 ▶가계부채 규제 방안 등으로 정리하여 평가하고자 함. 다만, 고금리 대책으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환대출 등의 내용은 서민금융 공약으로 분류함.

쟁점2.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가계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원인은 해결이 요원한 상태임. 경기침체, 고용불안, 저임금 등으로 가계의 소득창출이 어려운데다 주거·의료·교육 등과 관련한 복지제도가 부족하여 가계에 대한 소득보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음. 가계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소비여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소득증가 없는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부실을 초래하고 소비여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의 활력을 잃게 함. 이는 국민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여기에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가계부채문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켜 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시킨다는 관점과 접근이 필요함.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고 정책과, 소득보전 정책이 함께 가야함.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대책은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 등 채권자 보호관점에서 이루어 졌음.

정부는 서민금융의 큰 축을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접근성 제고)’ 하는 것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전자는 ‘빚을 내서 빚 돌려막기’ 정책인 반면, 후자는 ‘채무자로부터 최대한 빚을 받아내기’로 판단됨.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중한 채무에 짓눌리는 채무자들을 채무조정절차를 통해 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필요임.

채무조정이 까다로워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활동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음. 또한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신용회복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포함)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 있음.

쟁점3. 서민금융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리사각지대로 일컬어지던 10%대 중금리 신용대출과 관련한 상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²을 내놓는 등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

1 2016.1.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

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중금리 신용대출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 대의 개인신용대출(일반적으로 4~7등급, 7~15% 금리 개인 신용대출로 이해 가능)을 지칭³ 함.

중금리 신용대출은 단순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됨.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금융, 즉 대출로 접근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임. 이에 4개 정당이 서민금융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함께 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2016.1.27.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3 2016.1.27.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쟁점1.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

새누리당, 고금리 근절 방안 미흡하고, 실효성 없고 더 큰 부작용 우려되는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고금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없음. 원론적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제시

국민의당,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확인 어려워

정의당, 고금리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과 무분별한 대출 완화 규제 의지 밝혀

<표1> 4개 정당 20대 총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 관련 공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고금리 대책	○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 - 최근의 낮은 기준금리 및 금융업(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인하(34.9%→ 27.9%)등 제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이자제한법상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25%에서 20%로 인하 - 이자제한법 개정 추진('16년 중)	○ 최고 27.9%에 달하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과도한 이자부담 경감	없음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상한이자 일치 및 20% 대로 인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	○ 금융기관의 악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 ○ 정부 정책에 순응한 고정금리 대출자의 역차별 방지 - 정부의 고정금리 상품 강화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이동한 이용자들이 금리변동에 따라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추가 부담(중도상환수수료 등) 없이 인하된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 장기고정금리대출 유도 및 원리금동시상환시 이자경감방안 마련	없음	없음
가계부채 규제 방안	없음	없음	없음	○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DTI 규제를 시행령 대신 법제화

출처

2016.3.21.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2016.3.29. 새누리당 보도자료 <새누리 경제정책공약 2호_거시경제정책운용>

2016.3.26.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2016.3.24. 국민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2016.2.24. 정의당 선거공약 <정의로운 복지>

1.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 중 고금리대책으로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 인하’를 제시하고 세부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상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25%에서 20%로 인하’ 하도록 2016년 중으로 이자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그런데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고면서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25%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연체이자의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고 이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새누리당의 공약이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인하하겠다는 것 인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본 보고서는 새누리당의 공약을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한도를 25%에서 20%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평가하였음.
- 새누리당의 공약은 카드사, 대부업자 등의 특혜금리를 그대로 둔 채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한해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 인하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효과는 제한적임.
 -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카드사, 등록대부업자 등을 예외로 둬으로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7.9%)를 적용받도록 함. 결국 이들은 폭리나 다름없는 특혜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임.
 - 이자제한법 상 이자율을 20%로 낮춘다고 해도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을 고금리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대부업자 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는 여전히 고금리에 시달릴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대부업자 등의 특혜금리를 없애고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제한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폭리제한선(미국 각 주 평균 8%~18% 이하, 일본 20% 이하, 대만 20% 이하 등)인 연 20% 이내로 금리를 낮추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대책이 필요함.
- 새누리당은 공약집 발표 이후 ‘7대 새누리 경제정책 공약’을 통해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 방안을 추가로 발표함. 이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으로 분류 가능한 내용임.
- 새누리당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이 라기보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보임. 현행법 상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임.

-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으로 분류 가능한 새누리당의 한국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방안은 특정 정당의 공약으로 손쉽게 거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중앙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방안과 같은 통화신용정책은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 고유의 권한임. 수백 조 원에 달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는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음. 또한 일부의 주택담보 대출자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는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물가상승의 리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감당하도록 하는 것임.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공약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것인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함 것인지 의문임.
- 이밖에 가계부채 총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LTV·DTI 규제 관련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고금리 대책으로 분류 가능한 ‘최고 27.9%에 달하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과도한 이자부담 경감’을 제시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으로 볼 수 있는 ‘정부 정책에 순응한 고정금리 대출자의 역차별 방지’, ‘금융기관의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 ‘장기고정금리대출 유도 및 원리금동시상환시 이자경감방안 마련’ 등을 공약으로 밝힘.
- 이밖에 가계부채 총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LTV·DTI 규제 관련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음.
- 더불어민주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고금리 대책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은 목표의 추상수위가 높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고금리 대책의 경우, ‘적정성 심사로 과도한 이자부담 경감’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과도한 이자부담을 ‘어느 선’까지 경감하겠다는 등 현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함.
-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의 경우 원론에서 그치는 내용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10대 정책에 ‘신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LTV·DTI 규제 개선’을 제시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집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반감 등을 더 우려한 것으로 보임.
- 지난 대선공약으로 ‘약탈적 대출을 제한하는 공정대출법 제정’과 함께 ‘이자율의 상한

을 25%로 인하하고 위반 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을 제시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한계가구, 과중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고금리 근절방안 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당혹스러운 지점임.

국민의당

- 공약 없음.
- 2015년 말 기준 자금순환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1,422조 7천억 원(잠정)이며 가계신용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200조 원(잠정)을 돌파하고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77.4%,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 144.2%로 계속해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총량뿐만 아니라 악화되는 구조와 질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당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됨.

정의당

- 정의당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 중 고금리 대책으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상한이자 일치 및 20% 대로 인하' 를 제시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DTI 규제를 시행령 대신 법제화' 를 공약으로 밝힘.
- 이밖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음.
- 다른 당과 비교하여 정의당은 고금리 대책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제시한 가계부채 규제 방안 역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평가 가능함.
 -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당과 비교하여 가장 적극적인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상한이자 일치 및 20% 대로 인하' 를 제시함. 다만, 고금리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안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빠져있음.
 - 가계부채 규제 방안인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DTI 규제를 시행령 대신 법제화' 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대출 완화를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방안임. 다만, DTI 규제 제한이 완화된 바 있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대출자가 양산된 상황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인 과잉대출을 금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규제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한 바 있음.

공약별 비교 및 평가

-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년 발표)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지표로 삼고 2012년 163.8% 에서 향후 5년 간 5%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LTV·DTI 등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오히려 급증하고, 2015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사상 최대인 169.9%⁴ 를 기록함.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하지만 가계의 상환능력을 담보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 이에 우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해야 함.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일정정도 줄이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함.
- 고금리 대책의 경우, 새누리당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의당은 공약이 없으며, 정의당은 나머지 정당에 비해 가장 효과적인 공약을 제시함. 새누리당은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 수준 인하를 제시하였으며 정의당은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 수준 인하에 덧붙여 대부업의 특혜금리를 없애고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에 일치시켜 금리를 낮추는 고금리 고통 절감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공약을 제시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과도한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시함.
-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의 경우, 새누리당의 공약은 부적절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미흡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공약 없음. 새누리당의 경우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중앙은행의 자주성을 침해하며 현행법상 가능하지도 않은 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부적절한 공약을 제시함.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미흡한 공약을 제시함.
- 가계부채 규제방안의 경우, 정의당에서만 공약을 제시하였음. 현재 완화된 LTV·DTI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과 악화된 구조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4개 정당의 공약이 부실한 점은 경제성장을 목표에 치중하여 가계부채 위기를 방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운용을 동조·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채주도성장의 중단, LTV·DTI를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의 증가를 제한하거나 나아가 축소시키는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개 정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 공약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고민과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움.

4 2016.3.31. 한국은행 <2015년 중 자금순환 동향>, 2016.4.1. 김기준 의원실 <가계부채 비율 11년 연속 상승, 170%로 경충 뛰어>

쟁점2.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새누리당,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정책’ 일변도

더불어민주당, 채권매각·추심에 집중, 뚜렷한 성과 예상되나 전반적인 제도개선 미흡

국민의당,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채무자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 의지 확인 어려워

정의당, 채무조정 방안·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등 두루 제시

<표2> 4개 정당 20대 총선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관련 공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 채무자의 최소생 활비 보장을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액을 최소 18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확대 - 대출만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16년 상반기 중 실시)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추진시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60%로 확대(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70%→90%로 확대('16년 상반기 중 실시))	○ 제 1단계 :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부담 경감 -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 - 금융기관 보유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채권은 추가 매입 후 소각 ○ 제 2단계 :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 -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제기 금지 및 매각 제한 ○ 제 3단계 : 개인 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 -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기구’ 설치로 소액 금융분쟁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없음	○ 채무자 중심의 대책으로 채무자의 희생 및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 ①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감독 강화 - 개별 은행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부실채권 매각기준, 매각절차 등의 사항을 법제화 - 파산·면책·사망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개인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신용회복 또는 확정이 결정된 채권 등은 매각 금지 ② 소멸시효 완성채권 거래, 추심 금지 -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물론 이런 채권을 사고파는 것도 금지 ③ 저소득층 부실채권 탕감 - 공적기구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대손상각 등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방안 검토 ○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 설립 ①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할 수 있는 제도) ② 압류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 및 수준 재정비 ③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사정이나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④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 ⑤ 신용불량 등록기간의 축소 및 절차 간소화 ○ 지자체별 금융복지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신용회복 및 자립 지원

출처 :

2016.3.21.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2016.3.26.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2016.3.24. 국민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2016.2.24. 정의당 선거공약 <정의로운 복지>

새누리당

- 새누리당의 경우,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관련 공약으로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을 하겠다며 ▶채무자의 최소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액을 최소 180만 원(현행 150만 원)으로 확대 ▶대출만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16년 상반기 중 실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추진시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60%로 확대(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70%→90%로 확대('16년 상반기 중 실시)) 등을 제시함.
- 새누리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과정에서 감면율의 최대치만 확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함.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확대를 통해 가계(채무자)의 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비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더욱 과감한 빚탕감 정책을 제시할 필요 있음.
 - 압류 금지되는 급여액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하나의 수치를 정할 것이 아니라 독일 민법처럼 부양가족수를 감안하여 차등화하여 채무자의 각 가구별 생활비용을 현실에 맞게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은행권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출확대 정책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의 이자수익 유지를 위해 스스로 시도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임. 정부·여당은 채권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함. 새누리당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출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됨.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추진시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 → 60%로 확대’ 하는 것은 우선 채무자의 다양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감면율의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지 감면율의 최대치의 확대일 뿐 모든 채무자의 원금의 60%를 감면하는 것도 아니며 현행보다 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3단계 대책’으로 ▶1단계 :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 ▶2단계 :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 제기 금지 및 매각 제한 ▶3단계 :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소비자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제시함.
- 더불어민주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은 추심업체로부터 지속적인 불법·부당 채권추심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에만 집중한 제한적인 공약으로 평가

가능함.

-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3단계 대책’ 이라고 했지만,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소위 ‘죽은 채권’의 관리 강화 방안은 하나의 단계로 분류 가능함.
- 부실채권의 매각, 그리고 관리 유통과정의 개선은 필요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악성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장기간 채무상환 부담과 채권추심에 시달려온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소각 채권의 범위가 매우 좁아 이벤트적 성과를 넘어서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 채무조정 과정에서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개인회생 제도의 개선안을 평가할 만함. 다만 이외에는 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특히, 2014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임의경매를 금지하는 내용과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라 주거권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빠져 있음.

국민의당

- 공약 없음.
- 국민의당은 과도한 빚으로 인한 가계의 고통과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이 절실함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 원인과 총량 조절 방안과 더불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등과 관련한 공약 역시 제시하고 있지 않음.

정의당

- 정의당의 경우, ▶ 채무자 중심의 대책으로 채무자의 회생 및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 방안 ▶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 설립 ▶ 지자체별 금융복지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신용회복 및 자립 지원 등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부실채권 규제 및 악성채무 탕감 방안과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함.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을 실현하기 위해 ▶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감독 강화 ▶ 소멸시효 완성채권 거래·추심 금지 ▶ 저소득층 부실채권 탕감 등과 같이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 압류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 및 수준 재정비 ▶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사

정이나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 ▶ 신용불량 등록기간의 축소 및 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세부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함.

- 정의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은 채무불이행에 따라 주거권을 위협받는 가계의 기초생계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추심업체의 지속적인 불법·부당 채권추심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환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센터 확산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공약별 비교 및 평가

-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과 더불어 채무자가 큰 무리 없이 빚을 갚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를 고려한 관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소득 증가보다 많은 부채 증가세와 저성장, 저임금 등으로 인해 가계의 상환능력을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전월세 전환 추세 속에서 임차주택을 구할 수 없는 무주택 전세가구 중 상당수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대략 150만 명에 달하는 하우스푸어 계층이 양산되고 있음.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 노동유연화, 저임금 등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 또는 자산매각으로 기존의 채무상환이 곤란한 과중채무와 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 대부업 등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양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이며, 문제 발생 시 당장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채무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가정파탄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해왔음. 따라서 가정파탄이 우려되는 다중채무자 등의 경우 주택담보를 변제계획에 포함하는 ‘하우스푸어 가정파탄방지법’과 같은 중산층 채무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소위,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구제하는 대책과 함께, 빚으로 빚을 갚아나가도 채무상환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중채무·다중채무자의 고통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채무조정 방안 등이 요구됨.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의 경우,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빚을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채권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보장으로 한계를 보임. 정의당의 경우, 한계가구, 과중채무자들의 고통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안을 두루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국민의당은 관련한 공약 없음.

쟁점3. 서민금융

새누리당,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서민금융진흥원 공약,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을 발표한 바 있으나 공약집에 누락

국민의당, 직접적인 지원 제시했지만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부족

정의당, 원론적인 수준 제시하여 공급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 부족

<표3> 4개 정당 20대 총선 서민금융 공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인터넷은행 10%대 대출상품,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 ○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 향후 3년간 1.4조원대의 10%대 중금리 상품 공급 ○ 자금지원, 금융·취업상담, 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통합	없음	○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 -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 업체 등에서 대출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도록 함 -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지역밀착 서민금융기관 대출의 이차보전 담당	공적 신용보증 확대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금리 대출 확대

출처 :

2016.3.21.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2016.3.26.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2016.3.24. 국민의당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2016.3.3. 정의당 선거공약 <중소상공인자영업 공약>

새누리당

- 새누리당의 경우, 서민금융 공약으로 ‘인터넷은행 10%대 대출상품,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를 제시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자금지원, 금융·취업상담, 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의 세부내용을 공약함.
- 새누리당의 서민금융 공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은 금산분리 완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함.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설립을 추진 중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

해 은행법의 취지에 반하고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월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또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막대한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의 영업에 활용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확립되었는지 여부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임.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 대출상품 공약은 적절성 여부를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역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정부 정책 중 하나임. 현재 정부·여당이 채무조정 기능을 삭제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으로서의 정보 집중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공급’ 기능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채권회수 등의 ‘사후관리’에도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 등은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적절함.

더불어민주당

- 공약 없음.
- 2016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에서 더불어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정책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발표한 바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10대 정책과 공약집에 수록되지 않아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음.

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지역밀착 서민금융기관 대출의 이차보전 담당 등을 제시함.
- 국민의당의 서민금융 공약은 10%대 중금리 대출 확대와 중·저금리 대출 확대를 제시한 새누리당, 정의당과는 달리 고금리를 전환하겠다는 내용임. 이는 고금리에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부분적이지만 직접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임. 하지만 고금리를 전화하는 금리의 수준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약으로 인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정의당

- 정의당은 ‘공적 신용보증 확대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금리 대출 확대’를 제시

함.

- 정의당의 서민금융 공약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에게 중·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역시 명시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공급주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통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공약별 비교 및 평가

- 정부자료⁵에 따르면,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 초과 금리로 대출받는 등 금리구조가 단절화된 금리단층과 총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증가(2012년 말, 223조 → 2015년 말, 258조)하였으나,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한 신용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으로 중금리 상품 출시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정부는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형성·확산되는 최근의 추세를 보다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현재 카드로캐피탈 등에 그치는 중금리 신용대출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가 금리단층과 신용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의 동력으로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가계의 재무구조가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됨.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대출로 접근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과 신용에 있어 심화되는 양극화, 고금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서민금융은 중앙정부가 통할하기보다 지원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4개 정당의 서민금융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 공약 전반에 걸쳐 「이자제한법」의 보편적 적용과 채무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부실한 채 제시되고 있음. 복지의 영역을 대출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 정책과 함께 공급주체와 금리 수준, 대상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해당 공약의 효과와 적절성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서민금융 공약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공급 주체로 하고 있어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유발하고 채무자 입장이 아니라 채권 금융기관 입장에 기초한 접근과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출 지원에만 치우칠 우려 등이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어 부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됨.

5 2016.1.27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자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유발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부채 규모의 축소와 함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부채탕감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 하지만 이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재원 조달 문제 등이 제기됨.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경기변동 및 소득분배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제도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이뤄져야 함.

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종합하고 3가지 쟁점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서민금융으로 나누어 비교·평가한 결과, 4개 정당 공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를 조절·규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두루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가계부채 발생 원인을 점검하여,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키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가계부담 완화대책, 민생대책 등이 병행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사전예방책’으로서 약탈적 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금지하고 가계부채 ‘사후대응책’으로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 회생 및 신용회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는 정당은 없었음.

정의당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거권을 보장하는 등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과 서민금융 공약은 부실함.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을 공약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나 회생과산절차에 대한 대책 중심의 공약을 제시함. 새누리당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한 공약을 일부 제시하고 있지만, 서민금융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등에서 향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우려됨. 국민의당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찾기 어려움.

새누리당 : 사실상, 정부 정책과 동일. 공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정책의 방향과 관점 부적절

새누리당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공약의 각각의 내용은 구체적임. 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전반의 방향과 관점이 채무자 중심에서 이뤄져 있으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

하지 않음. 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 실제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채권자 중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서민금융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⁶ 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려됨.

더불어민주당 :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부족,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제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 원인과 가계부채 규모와 질에 대한 대책은 없이 채무조정이나 회생과산 절차에 대한 대책에만 제한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전반적인 공약이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소극적임.

특히, ‘피에타 3법’ 등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2014년 대선공약에 비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현저히 부실함.

국민의당 : 구체적인 내용 부족한 서민금융 공약만 제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 원인과 가계부채 규모와 질에 대한 대책 전무함. 서민금융 공약만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함.

정의당 :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서민금융은 구체적인 내용 부족

고금리 근절과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위해 4개 정당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함. 다만,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서민금융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함. ^참

6 2014년 12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15년 10월 30일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결과, 2016년 3월 3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발행일 2016. 04. 04

발행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

담당 김은정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